

서평

산업단지를 넘어 국가주의 너머를 보다 『산업경관의 탄생: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업단지』(알트, 2014)

김영룡*



대한민국의 산업단지 형성에 대해 근본적인 육하원칙을 들이댄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예를 들어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 '총 3개의 구로 수출산업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한국수출산업공단, 1994). 한편, 산업단지 형성에 대한 '누가', '어떻게', '왜'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주관식 문제에 '자율적인 역량을 가진 중앙 정부와 관료'가 '국가 주도의 합리적인 경제개발계획으로' '수출

* Clark University 지리학과 박사과정 (YouKim@clarku.edu)

주도형 산업화를 이끌기 위해'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몇 점을 주겠는가? 최근 출간된 『산업경관의 탄생』의 저자들은 만점이 아닌 부분 점수만을 주지 않을까 싶다. 역설적이게도 0점이 아닌 이유는, 중앙 정부와 관료가 수많은 '누구' 중 일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의 '누구'로부터 '어떻게' 와 '왜'에 대한 다양한 답이 파생된다. 앞에서 제시한 부분 점수 답안은 '발전주의 국가(the developmental state)의 틀에서는 100점짜리 모범 답안일 것이다. 발전주의 국가론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및 동아시아 신흥 산업화 경제(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의 성장 메커니즘은 국가 중심의 서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발전주의 국가론은 대한민국의 성공 사례를 세계에 알리고 연구 대상 지역으로서 그 가치를 높인 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메커니즘을 서구학자들의 시각을 통해 이해했다는 어두운 면도 있었다. 이 책은 발전주의 국가론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가-사회의 분리'와 '방법론적 국민-국가주의'라는 발전주의 국가론의 두 가지 이론적 맹점을 짚음으로써, 발전주의 국가론은 경제 성장에 대한 나름의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국가-지역의 대결 구조를 낳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경관의 탄생』은 최근 《공간과사회》, 《대한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등에 수록되었던 구로, 울산, 포항제철, 마산, 창원, 구미 공단에 관한 사례 논문들을 각 장으로 엮고, 그에 대한 총론으로 1장을 시작하는 구성이다. 사례 논문들을 단순히 취합한 기존의 많은 서적들과는 달리, 이 책의 유기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면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힘이 있다. 즉, 이 책에는 모든 사례 논문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서론과 각 장의 논문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다. 그 덕분에 다양한 자료에서 기반을 둔 사례 연구를 읽으면서도 저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에 기여한 저자들이 집합적으로 구축해 온 다중스케일적 관점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은 발전주의 시기의 산업단지 형성을 사례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중스케일적 관점의 연구와는 차별화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민주화와 지방자치제 이후의 최근 사례들을 택했다면 저자들의 주장을 전달하기에 더욱 용이했을 것이다(13쪽). 이는 중앙 정부 외의 행위자들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의 인터뷰와 같은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 편한 길을 택하는 대신에 발전주의 시기의 산업단지라는 가시밭길을 택했다. 즉, 발전국가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사례를 취함으로써 다중스케일적 관점이 단지 발전주의 시기 이후의 대한민국 경제 공간을 설명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이 저작은 여전히 각 산업단지 형성 과정의 사례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 그칠 위험이 있다. 이 책이 쟁점화하는 발전주의 국가론의 한계이기도 한 '방법론적 국민-국가주의'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로, 국가 단위의 자료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구득하기에도 쉽기 때문에 흔히 국가가 연구의 영역적 단위(territorial unit)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사례 연구들은 방법론적 국민-국가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대안으로 제시하는 관점이 그 한계를 충분히 극복한 것 같지는 않다. 즉, 다양한 행위자가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가 되려면 그 행위자들의 속성과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세계생산네트워크(Global production network)의 관점을 취한 연구들은 국가, 다국적기업 등 행위자들의 관계를 지식 교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전략적 연결(strategic coupling)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Phelps, 2008; Yeung, 2008; MacKinnon, 2012). 물론 이 책의 사례 연구들이 이용한 문헌자료의 특성상 양적으로 환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형성 과정의 사례를 행위자 별로 정리해서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이 책에서 표방하는 다중스케일적 관점의 묘미를 살리기 어렵다. 기술적인 서사에 덧붙여 특정 산업단지의 형성에 참여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한 장의 도식으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 한계는, 한국의 산업단지들을 각 사례로 삼은 이 책의 연구들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나, 그 외의 사례와는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비록 이 책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발전주의 국가론의 힘은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Hall and Soskice, 2001)에서 연유한 '비교제도적 관점'(comparative institutionalist view)이라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접근법에 있다. 발전주의 국가론은 대한민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4개 사례를 기존의 선진국 경제 또는 개발도상국 경제와 제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며, 이를 통해 이 대표적인 사례 지역들에 기반을 두는 학자들은 물론이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학자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이 책에서 사례로 제시하는 한국의 산업단지 형성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국가의 산업단지 또는 국내의 (비산업단지) 경제 공간과 비교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 책의 관점에 의하면 행위자들을 국가스케일, 초국가 스케일, 지방 스케일로 분류했는데 (34~44쪽),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이와 동일한 스케일의 범주로 분류되어 비교, 추상화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 책의 독자들은 각 장에 실린 사례 연구들을 읽으며 저자들이 간과한 또 다른 행위자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중스케일적 관점이 향후 연구에 있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기존의 사례 연구에 덧붙여 추가적인 행위자들과 그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함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논의와 사례 연구에 있어, 발전주의 국가론에서 제시한 국가의 역할을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행위자의 하나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책의 저자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주의 시기 산업단지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논의를 한정하고 있지만, 독자들에게는 더욱 많은 가능성과 기회를 제시해준다. 그 자체로 또 다른 탁상공론이 되기 쉬운 '열린 통섭의 학문'의 가능성을 이 책의 다중스케

일적 관점에서 엿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